


2013년 국정감사

한국수출입은행 **보도자료**


국회의원 류성길 (대구 동구갑)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607호 T. 02)784-3852 / F. 02)788-0269 / E. yoo575@hanmail.net

보도일시	2013. 10. 23.(수)~	담당자	손정갑 보좌관
------	-------------------	-----	---------

▶ AEO 인증을 통한 수출중소기업 지원 방안 모색해야

– AEO 인증제도의 인식부족, 시간·비용 부담으로 수출중소기업 어려움 커

▶ 경수로 사업, 투자금 정산이 답이다!

– 공사기금에서 매년 이자만 1,100억원 차입해, 증자기 상환계획에 따라 규모 줄여가야

☞ 경수로사업 우리 정부 분담금은 대출원금 1조 3,744억원과 이자 9,251억원! 합계 2조 2,995억원 규모

▶ 개성공단 재가동에 따른 경협보험금 회수!

– 기업의 사정 고려한 탄력적인 대응 필요

☞ 수출입은행 개성공단에 재가동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보험금 반납 요청! 입주기업은 한숨!

AEO 인증제도 우대를 통한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제고 방안

□ 현황과 문제점

○ 미국 9.11 테러 이후 무역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세계관세기구(WCO)에서 무역안전과 원활한 무역활동을 보장하는 국제규격의 ‘무역안전규정’을 수립(2005. 6)하였으며, 이는 AEO 인증제도의 근간이 되고 있음.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에 따른 관세청의 종합인증 우수업체를 의미

– 우리나라는 2009. 4월 AEO 인증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중국·일본·미국 등 주요 교역국과 상호인정협정(MRA)*을 既 체결

*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협정) : 상대국의 AEO제도를 자국의 AEO제도와 동등하게 인정

상호인정협정 체결 현황

국 가	체결일	발효일	국 가	체결일	발효일
미국	‘10. 6	‘10. 9	일본	‘11. 5	‘11. 11
싱가포르	‘10. 6	‘11. 1	뉴질랜드	‘11. 6	‘12. 1
캐나다	‘10. 6	미발효	중국	‘13. 6	미발효

자료: WCO, AEO Compendium, 2011 및 관세청 발표자료

< AEO제도와 상호인정협정 개요 >

□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란?

- 관세당국이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하여 공인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제도로써 공인업체에는 물품검사 면제 등 통관 상 각종 혜택이 제공됨
- 전 세계 59개국이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09년 4월 시행하였음

□ 상호인정협정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 이란?

- 양국간 AEO제도에 대한 상호 인정을 통해 일국의 AEO 공인업체가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 AEO 공인업체와 동등한 수준의 통관 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협력협정임
- 현재 전 세계 20개의 MRA가 체결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뉴질랜드 등 5개국과 MRA를 체결 (전 세계 3위 다체결국)

○ (수출 중소기업 인증 실적부진) 2013년 10월 15일 현재, AEO 공인업체는 총 484개사이며, 이중 수출기업(대기업 포함)은 112개사임.

AEO 인증제도의 인식 부족, 인증 획득을 위한 시간·비용 부담 등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인증실적은 더욱 부진한 실정임.

* AEO 인증대상 :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화물운송주선업자, 보세구역 운영인, 보세운송업체, 선박회사, 항공사, 하역업자

- 수출 중소기업 85,882개사('12년) 중 AEO 인증획득은 0.03%인 27개사에 불과
- 수출 중소기업 중 54.5%가 AEO 인증이 불필요하다고 응답('10년 관세청 조사)

○ (AEO인증의 중요성) AEO 인증기업은 협정체결국의 신속 통관편의 등에 따른 시간·비용 절감으로 수출경쟁력 제고가 기대되는 바, 특히 수출중소기업을 위한 국가차원의 활성화방안이 필요

- 한·중 AEO 상호인정협정(2013년 6월)체결로 통관 효율이 50% 개선되면 양국 교역량은 3.4~11.1%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중국과의 MRA 체결 효과 : 화물검사 생략 시 컨테이너 1TEU당 500~1,000달러 비용 절감이 가능, 경제적 효과 연간 2조 7,000억원 추산

- 관세청은 '11년 이후 수출 중소기업의 'AEO 공인 획득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 중
* 컨설팅 비용의 최대 80%까지 지원(최대 2,240만원)

□ 질의 및 정책제언

질의 1) 수출입은행은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하여 외부인증에 대하여 우대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구체적으로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질의 2) 수출 중소기업의 AEO 인증이 부진한 실정임.

정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AEO 인증제도를 우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제언) 박근혜 정부는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수출입은행도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관세청과 협력하여 AEO인증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고 컨설팅 등에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 드림.

경수로사업 투자금 정산이 답이다

- 공자기금에서 매년 이자만 1,100억원 차입해, 중장기 상환계획에 따라 규모를 줄여가야 -

□ 현황과 문제점

○ 대북 경수로 사업은 1994년 10월 미국과 북한 간의 '제네바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EU 등이 자금을 모아 북한 핵개발 포기를 약속받는 대신 KEDO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를 중심으로 경수로를 지어주기로 한 사업임.

- 경수로 사업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4.10 :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서 서명 · '95. 3 :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발족 · '95.12 : KEDO-북한간 경수로공급협정 서명 · '01. 9 : 본공사 착공 (발전소 기초굴착) · '03.11 : KEDO 집행이사회 사업 중단(suspension)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공정률 34.5% ('03.11 사업중단시 기준) - 소요 공사비 : 15.75억불 (한국 11.46억불, 일본 4.11억불, EU 0.18억불) · '06. 1 : 북한 현장인력 전원 철수 · '06. 5 : KEDO집행이사회 사업 종료 결의 · '06.12 : KEDO-한전간 경수로사업 종결협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10 : KEDO집행이사회, 원전 기자재 처분 결정 · '12. 3 : 한전, 「기자재 최종 매각보고서」 KEDO에 제출 · '13. 1 : KEDO집행이사회, 한전의 최종 매각보고서 승인 및 사업 청산 종료
---	--

○ (대북 경수로 자금상환) 경수로사업 우리 정부 분담금은 2000년 2월 ~ 2006년 12월 까지 집행한 대출원금 1조 3,744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 비용누계 9,251억원*을 합한 총 2조 2,995억원 규모임.

* KEDO 대출 재원은 전액 공자기금에서 조달한 바, 동 금액은 '13. 9월 현재 공자기금 앞으로 상환하여야 할 원금(1조 3,744억원)에 대한 이자를 원금화한 금액

- 2012년부터 증가되는 차입금의 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공자기금 이자 발생분(1,100억원)을 정부재정에서 출연하여 상환을 시작하였으며, 매년 1,100억원 규모로 경수로 계정 이자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임.

- 2012년부터 정부 재정에서 이자비용을 보전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총 1,161억원 상환 ⇨ 2013년 9월말 현재 총 801억원 상환하였음

남북협력기금 연도별 조달 현황

(억원)					
연 도	정부출연금	정부외출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	운용수익 등	총 조 성 액
2002	4,900	0.78	5,050	425	10,375
2003	3,000	0.01	8,230	490	11,720
2004	1,714	0.01	3,100	459	5,273
2005	5,000	0.33	4,600	434	10,034
2006	6,500	0.15	9,400	456	16,357
2007	5,000	0.75	5,846	502	11,349
2008	6,500	0.52	1,475	689	8,665
2009	-	0.56	810	893	1,704
2010	-	0.5	8,750	741	9,491
2011	-	0.2	1,044	570	1,614
2012	1,128	0.02	4,000	694	5,822
2013.9월	801	0.03	1,700	449	2,950
계 (비중)	45,893 (39.4%)	25 (0.02%)	61,152 (52.5%)	9,351 (8.0%)	116,421 (100.0%)

· 민간출연 현황 : 75건 25억원은 SBS·동아일보 경의선 철도복원 모금(약 10억원),

민주평통 자문위원(3억원), 하이트맥주 남북사랑 캠페인(2.4억원),

수출입은행 임직원(1.7억원) 외 기타 개인, 단체 등

* 공자기금차입금은 경수로 사업비 지원(6조 22억원)+남북기금계정(1,130억원)으로 지출 :

· 공자기금차입금 중 경수로 사업비 지원으로 쓰인 금액

차입금(6조 22억원) - 상환액(3조 7,027억원) = 잔액(2조 2,995억원)

□ 질의 및 정책제언

질의 1) 남북협력기금의 여유자금과 부채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 2) 남북협력기금에서 KEDO로 대출해 준 것은 얼마입니까? 채무만 남게 되었는데, 이것이 남북협력기금 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이자비용 1,100억원임.

질의 3) 남북협력기금의 여유자금 운용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이것을 통한 공자기금 차입금에 대한 남북협력자금 내에서의 상환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 4) 2011년까지 정부는 공자기금에서의 차입을 통해 이자와 원금 상환(revolving)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오다, 금년부터 이자비용을 정부재정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한 실정임.

원금을 포함한 근본적 상환 계획과 더불어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KEDO 대여금으로 인한 남북협력기금 부실화에 대한 해결대책을 정부와 상의해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제언) 경수로 차입금 정산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원금을 상환하도록 해 남북협력기금 운용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주시길 당부 드림.

개성공단 재가동에 따른 경협보험금 회수

- 기업의 사정을 고려한 탄력적인 대응 필요해-

□ 현황과 문제점

○ 북한의 근로자 철수 발표에 따라 2013년 4월 8일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었으며, 정부는 2013년 8월 7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한 경협보험금을 지급하였음. 그리고 개성공단 재가동에 따라 기존 지급했던 경협보험금을 15일 이내 반납하도록 결정함으로써 기업측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음.

- 정부의 경협보험금 지급 결정 이전, 경협보험금을 신청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109개사로 신청금액은 2,809억원으로 이 중 2013년 9월 17일 기준으로 59개사가 1,760억원의 보험금을 수출입은행으로 부터 수령하였음

* 경협보험을 받게 되면, 사실상 개성공단에서 철수한다는 의미였음. 정부에 공단 내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게 되면 정부가 재산을 처분하는 '대위권'을 행사하게 되기 때문.

개성공단 경협보험금 지급현황

(개사, 억원)

구 분	지급심사 완료	실제 보험금 지급
기업수	109	59
금 액	2,809	1,761

자료: 수출입은행

○ (경협보험금 반납) 수출입은행은 2013년 9월 16일 북한 근로자의 투입으로 본격적으로 개성공단이 재가동됨에 따라 개성공단에 대한 비상위험 해제를 사유로 재가동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보험금 반납을 요청하는 공문을 59개 기업에 발송하였음.

현재 일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경영애로를 호소하며 보험금 반납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임.

- 수출입은행 공문, "13.9.16부터 개성공단이 재가동됨에 따라, 약정서 제8항의 '근저당권(양도담보권 포함)'이 설정된 개성공단 자산의 처분'(경매공고일은 향후 지정)과 관련, 제9항에 따라 15영업일('13.10.15일 예상) 이내 보험금을 반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통일부 방침에 의거 수출입은행이 대상 기업에 보험금 반납 공문 발송

· 통일부, 보험금 반납조치를 '이중수해를 방지하기 위한 상 관행과 법 논리에 따른 조치'
· 연체금은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에 따른 지연 배상금율을 준용해 1~30일은 3%, 31~90일은 6%, 그리고 90일 초과 시에는 9% 적용

참 고

경협보험금 반납 안내 공문



우편번호 : 150-996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1 담당자 : 유 인 규
FAX : (02)3779-6758 전 화 : (02)3779-6711 E-mail : ingumi@koreaexim.go.kr

문서기호 : 남북13P - 1864

발신일자 : 2013. 9. 17

수 신 : 수신처 참고

제 목 : 근저당권(양도담보권 포함) 설정 자산 처분의 개시 및 경협보험금 반납 안내

1. 귀사와 당행이 체결한 경제협력사업보험 계약 및 대위권 행사를 위한 약정서와 관련됩니다.

2. '13.9.16부터 개성공단이 재가동됨에 따라, 약정서 제8항의 '근저당권(양도담보권 포함)'이 설정된 개성공단 자산의 처분'(경매공고일은 향후 지정)과 관련, 제9항에 따라 15영업일('13.10.15일 예상) 이내 보험금을 반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개성공단 재가동을 진행 중에도 불구하고 동 기간 내 보험금을 반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남북협력기금 지원 지침」 별표4의 요율을 적용한 연체금이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연체기간	기금이 정한 이율
30일 이내	연 3%
90일 이내	연 6%
90일 초과	연 9%

붙.

한국수출입은행 남북협력사업부장

수신처 : 보험금 수령 보험계약자 대표

□ 질의 및 정책제언

질의 1) 수출입은행이 발송한 공문에 의하면,

기업들은 지난 10월 15일까지 경험보험금을 반납하여야 했음.

이 기한을 넘긴 기업들은 지금도 지연배상금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현재 납부기업은 몇 개사며, 15일까지 반납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수출입은행은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질의 2) 이미 경험보험금을 수령한 일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보험금 반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임.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예의 시간을 달라’는 것인데, 보험 약관 등에 의거 보험금 반납 기간의 연장이나 유예가 가능한 것인지?

질의 3) 지난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부총리는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보험금 반납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이나 신용대출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수출입은행이 운영 중인 정책자금이나 신용대출을 통해 경험보험금에 대한 별도지원이 가능한 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질의 4) 경험자금 유예 등의 조치와는 별도로 보험금 회수를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으며, 경영사정 악화로 보험금 반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